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①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의 청렴포털 개도국 공유 위해 협력하기로('22.7.1)

② 국민권익위,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에서 한국 반부패 정책 국민참여 우수사례 알려('22.7.5)

③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안내서 마련('22.6.30)

④ 국민권익위, '청렴 대한민국' 주도할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2030 청렴인재 양성('22.6.30)

⑤ 국민권익위, 몰도바·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몽골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알린다('22.7.12)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의 청렴포털 개도국 공유 위해 협력하기로

청렴포털 내용 및 성과 등 공유하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향후 협력대상국 선정해 기술지원 등 예정

(22. 7. 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29일 한국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의 내용과 성과・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세네갈,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 청렴포털(Clean Portal) :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이번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와 UNDP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인 '한국의 디지털 기술 기반 반부패 시스템 공유 사업'의 첫 단계이다.

UNDP는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디지털 전략계획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와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을 개발하고 운영해 온 노하우와 경험을 설명했다.

이후 UNDP 서울정책센터는 청렴포털 공유 협력사업과 UNDP 디지털 전략계획과의 연계성 및 협력(파트너) 대상국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국민권익위와 UNDP는 청렴포털 전수사업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 적합성을 검토한 후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세부 분석을 거쳐 기술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청렴포털은 부패·공익신고부터 보호·보상까지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으로 이를 구축하는 국가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UNDP와 협력해 개발도상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권익위-UNDP 온라인 설명회 사진

국민권익위,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에서 한국 반부패 정책 국민참여 우수사례 알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소개,
청년층 대상 반부패 교육 사례 공유

(22. 7. 5. 국민권익위)

이번 달 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22년 제2차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CWG)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국민 참여 사례와 청년층 대상 반부패 교육 사례를 국제사회에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2차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해 '반부패 정책과 국민 참여'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청렴연수원의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다.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이하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호주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로, 회원국의 반부패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2년 이행보고서와 사례집 작성, 반부

패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한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주최 측 요청으로 첫날 워크숍에서 '반부패 정책과 국민 참여'를 주제로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소개한다.

또 청년층의 반부패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참여 특히 청년층의 반부패 인식 제고는 효율적인 부패 예방과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국민 참여와 교육 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안내서 마련

- 공공기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및

-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강화... 기관 진단·교육도 지원 예정

(22. 6. 30.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안내서가 30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는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안내서를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ESG 공시 및 투자가 중요해지고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하는 만큼 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 등 국제 ESG 공시기준에 '반부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 '반부패'가 포함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외 문헌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K-CP 개발을 추진해 왔다.

K-CP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국제 반부패 기준에 맞는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패위험을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K-CP는 ▲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매핑(mapping) ▲부패 리스크 예방·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재 및 인센티브의 5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 OECD·TI·UNGC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반부패 안내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법령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구성체계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K-CP를 적극 실천하면 부패,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 회계 부정, 방만 경영 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K-CP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용 K-CP 안내서도 올해 연말까지 개발해 민간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발맞춰 공공기관부터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청렴 대한민국’ 주도할 대학생 · 취업준비생 등 2030 청렴인재 양성

29일 제1기‘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수료식 개최

(22. 6. 30. 국민권익위)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하는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자 67명이 배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9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난 8주 동안 진행된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반부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예비사회인·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전현희 위원장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제도’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청렴도와 국가경쟁력의 관계 ▲부패발생 구조·문화 및 부패 변화 추세 ▲국제 반부패 규범과 각국의 대응 방식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이정주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엘리스 베르그룬 OECD 정책분석관 등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젠가’ 저자인 정진영 작가 등 인문학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수료식에서는 김민아, 김윤희, 전예원 등 성적 우수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반부패 현안 발굴 및 공론화 등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돼 활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참가자 중 20명은 '국민참여 모니터단'으로 선발돼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다.

또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을 수료한 28명에게는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교육과정을 통해 쌓은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널리 알리고, 행정의 감시자 및 국민권익의 수호자로서 적극 활동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식 사진

<사진1.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한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2.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수료식 및 시상식>

국민권익위, 몰도바·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몽골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알린다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 반부패 교육수요 대응 위해 러시아어로 반부패 연수 과정 운영

(22. 7. 12.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도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몰도바, 몽골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이번 달 12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40명이 참여한다.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로 구성된다.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청탁금지법」등 국내 반부패 법령과 함께 유엔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협약의 주요 내용도 함께 소개된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와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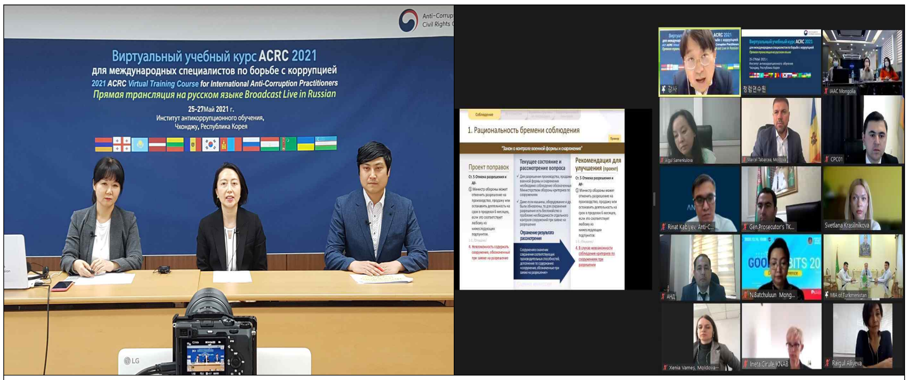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영어 과정과 별도로 2020년에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연수과정에 현재까지 참여한 국가는 67개국에 달하며, 그간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이 현업에 적용되는 등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연수과정은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청렴도(CPI)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2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 과정(2021.5.25.~5.27.)